

‘추경 열차’ 한국당 빼고 출발하나

與, 3당만의 심사 착수로 돌파구... 김동연 부총리도 野 설득 바른정당 긍정적·국민의당은 확답 피해... 청문정국이 변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쳐놓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만의 심사 착수’라는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경 심사에 긍정적인 입장이라 ‘추경 열차’의 개문발차를 위한 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추경이 인사청문회 3라운드 정국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여야 3당만의 심사가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까지 한국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거부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라도 이번 주부터

추경심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들 야 2당을 설득해 가능한 상임위안이라도 추경안을 상정하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민주당 백재현 의원) 직권으로 상정하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추경 발목잡기로 새 정부의 출발을 가로막고 있다”(추미애 대표), “야당들이 이대로 추경을 더 미루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의 절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질 것”(우 원내대표)이라며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야 3당 정책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설득하고 나섰다.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일단 추경심사 착수에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날 국민의당은 “한국당을 배제한 추경심사 강행에 동의 못 한다”는 전날의 강경한 입장에서 벗어났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추경심사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여당이 야당을 더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한국당이 반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않는다는 기류가 강하다.

바른정당도 추경 심의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 전체회의에서 “바른정당은 추경안 심의를 거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

보자 등 이른바 ‘부적격 신(新) 3중 세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추경 등 현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어 결국 추경심사에 착수하면 이날 총리 인준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당을 뺀 여야 3당 공조체제가 가동되는 셈이어서 한국당으로서 고민이 큰 지점이다.

하지만 여야 3당만의 추경 심사는 이번 주에 출몰이 예정된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유동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국당과 함께 자진사퇴 공세를 펴고 있어 여야의 인사청문 정국대치가 심해지면 추경 문제가 불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청문회 이슈된 ‘최순실 은닉재산’

한승희 국제청장 후보자 “세무조사 진행중”

여야 “철저히 조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6일 실시한 한승희 국제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최순실 은닉 재산’이 뜨거운 이슈가 됐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 씨의 은닉 재산과 세무탈루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최순실의 은닉 재산을 국제청이 조사하고 있느냐”고 질의한 뒤 최 씨의 은닉재산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계재단 조사도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탈세를 철저히 조사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권 실세들이 저지른 탈세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기업들이 세무 조사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두려워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며 정치적 세무조사의 악영향을 지적했다.

이에 한승희 국제청장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이 최순실(61)씨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추적을 당부한 것과 관련,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유념해서 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최태만 일가 70명의 재산이 2730억 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재산이 2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국제청 신고가 기준 2230억 원에 달하는 토지와 건물 178건을 보유하고 예금 등 금융자산도 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한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국제청장으로 임명되면)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내년 1월부터 도입 예정이지만 논의가 나오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는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시기를 정해주면 차질 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농어업비서관 신정훈 여성가족비서관 은수미



신정훈 은수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에 신정훈, 여성가족비서관에 은수미 전 의원을 각각 내정함으로써 26일 확인됐다.

26일 청와대 관계자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두 전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내정 사실을 통보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화순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했던 신 전 의원은 광주 인성고와 고려대 신방과를 나왔으며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을 주도해 복역했다. 복역을 마치고는 고향인 나주에서 농민회 활동을 하다가 38세에 나주시장이 되기도 했다. 또 지난 2014년 7월 재보선에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과 농어업담당 원내부대표를 지냈으며 특히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 공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은 전 의원은 사회학자이자 노동전문가이고 19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의원 시절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고 지난해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서 10시간 기록을 세우 주목받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대선 때 제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인사 의혹과 관련, “제보된 카카오톡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과한 뒤 이용주·김유정 의원과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문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의혹은 조작” 사과

靑 “감사한 일... 협치 도움되길”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 때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성 취업 의혹에 대해 “제보가 조작됐다”며 공식 사과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은 5월 준용씨의 미국 파스스 스쿨 동료 증언을 근거로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의 개인 의혹을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정말로 죄송하다”면서 “당사자인 문 대통령과 준용씨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5월 5일 “(준용 씨가) ‘아빠(문 대통령)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다”는 내용이 담긴 준용씨 동료의 육성 녹음 파일 등을 공개하면서 고용정보원 특혜취

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당시 의혹 제기 경위와 관련, “이유미 당원으로부터 관련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받았고 그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해 공개했다”면서 “그러나 당시 관련 자료를 제공한 이유미 당원이 직접 조작해 작성한 거짓 자료였다고 여제 고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그렇게 말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고, 원칙적으로 정당정치 발전이나 협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최순실 만난 천홍욱 관세청장 위증죄 검토”

박영선 의원 청문회 발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6일 검찰조사에서 최순실씨를 만난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알려진 천홍욱 관세청장에 대해 “위증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의 한승희 국제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천 관세청장이 취임 다음날 최순실씨를 만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한 것이 밝혀졌는데 지난 2월 기재위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기재위서 질의 당시 천 관세청장은 ‘법과 원칙대로 했다’,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했다”

며 “거짓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위증죄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은 ‘검찰 수사에서 천 청장이 지난해 관세청장 임명 직전 최순실 씨 측근이었던 그 씨와 비밀 면담을 본 사실과 관세청장 취임 이틀 날 최 씨에게 식사 접대를 하며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이날 “천 관세청장은 2016년 5월 25일 취임 이후 다양한 외부인사를 만났으며 그 과정에서 최순실씨를 단 한 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며 “천 청장은 취임 전 최씨를 알지도, 만난 적도 없으며 인사청탁을 한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강병원 등 정책위 부의장 12명 임명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강병원 의원 등 12명을 임명했다.

정책위 부의장은 정조위원장에 아래에 위치하는 자리로 그동안 공석이였다.

신임 정책위 부의장은 분야별로 강병원(환경노동)·고용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권철승(산업통상자원)·기동민(보건복지)·김종민(기획재정)·김해영(정무)·김현권(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박주민(법제사법)·소병훈(안전행정)·안호영(국토교통)·오영훈(교육문화체육관광)·이재정(안전행정부) 의원이다.

백해련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최고위원회는 민주정부의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과 정책개발을 위해 정책위 부의장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 공장, 토지, 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자산]

NPL채권 매입하여 투자 수익에 참여하실 분

- ▶ 총 매입금액 : 11억원
- ▶ 1인 2,000만원 이상
- ▶ 투자금 회수기간 : 6~8개월
- ▶ 근저당설정 조건

- 채권 물건지는 투자하시는 분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J&Y 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